

# 민주, 기초비례 공천률 수정…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의총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6·3 대선, 50·60·70 바람 거셌다

70대 87.8%·60대 87.3%·50대 81.8% 투표…호남, 사전 투표율 높아

지난 6·3 대선에서 70대의 투표율이 87.8%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70대에 이어 60대 (87.3%)와 50대(81.8%)가 높았다. 80세 이상은 65.8%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80.3%, 남성 78.6%가 참여해 제20대 대선(여 77.5%·남 76.8%)과 마찬가지로 여성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선 선거일 투표율은 여성(46.1%)이 남성(41.3%)보다 4.8%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52.3%)가 선거 당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18세의 선거일 투표율은 51.3%로 과반수였지만 19세는 37.1%로 가장 낮았다. 사전투표율은

남성(36.2%)이 여성(33.3%)보다 2.9%p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투표 방식 선호도를 살펴보면 광주(당일 30.7%, 사전 52.1%), 전북(당일 26.5%, 사전 53.0%), 전남(당일 26.1%, 사전 56.5%)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선거일 투표율이 사전투표율보다 높았다. 재외투표율은 79.5%로 여성 (80.0%)이 남성(78.9%)보다 소폭 높았다.

한편 이번 분석은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전체 선거인 4436만3148명의 약 10% 정도인 450만 68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조사 투표율 (79.5%)은 실제 투표율(79.4%)과 0.1%p 차이를 보였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내년 지방선거 경선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 반영

1인1표제는 재부의 않기로…이재영 신임 민주연구원장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비례대표 경선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해 치르는 등 내년 지방 선거 공천률을 순복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밟아 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률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또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 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며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가 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권 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권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한편,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양산시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 구복규 화순군수, 당원 자격 정지 2년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혐의…지역 정가, 추가 전수조사 결과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현직 단체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당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민주당이 추가로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가면서 향후 중앙당의 중징계에 따른 내년 지방선거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구 군수에 대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 정지 2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로 구 군수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서 민주당 공천이 불가능해졌다. 민주당 당규상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면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구 군수의 발이 묶이면서 지역 정가는 대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민주당은 구 군수 외에도 전남도당 소속 입후보 예정자들에게도 절퇴를 내렸다.

민주당은 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각각 당원 자격

정지 2년과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의 핵심 배경에는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거나 (대납),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위장 전입시키는 방식이 동원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구 군수에 대한 중징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중앙당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의 다수 선거구에서 후보군이 재편되는 등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 ‘보완수사권’ 검찰 개혁 뜨거운 감자

개혁추진단 전문가 토론…“요구권만 남겨야” vs “권한 줘야” 분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서울 종로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 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와 같은 ‘수사+기소+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고 비판적 입장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는 “부파·

경제·내란·외환·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기존의 반부패부, 막·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검찰 수사관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의 핵심적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

소”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제도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을 허용하게 된다면 민생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차적 수사 기관인 중수청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검사가 사법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정권 초기 완수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늦어지면서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증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증액으로  
400%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